

국가별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 지수(CPI)란 게 있다.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가리키며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와 전 세계의 기업인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한다.

베를린 소재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180 여개 국가들의 이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다. 올해도 12월 1일 공개됐다.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5.4점을 기록했고 183개국 중에서 43위를 나타냈다. 점수면에서는 작년과 동일하지만 순위는 지난해 39위에서 4단계 하락했다.

부패인식지수 183개국 중 4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이며 아시아 주요국인 싱가포르(9.2점 5위) 홍콩(8.4점 12위) 일본(8점 14위) 대만(6.1점 32위)보다 낮은 수준이다. 1위는 뉴질랜드가 차지했고, 덴마크와 핀란드가 각각 2위에 랭크됐다. 스웨덴은 4위다. 공과 사가 철저히 구분되는 문화를 가진 북유럽 국가들이 해마다 청렴도 상위권에 오른다.

우리나라 청렴도 순위가 하락한 것은 금

특별기고

김 덕 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정치학박사)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의 청렴도

년 신규 편입된 바하마 등 3개 국가가 한국보다 높게 평가되었고, 국제평가기관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국가순위가 하락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뇌물과 부패 만연 정도' 설문조사에서,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지수공사(PERC)는 '공공부패의 심각성'에서 각각 예년보다 낮게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드러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전 국제청장 그림 로비 의혹' '대기업 비자금 의혹 수사' 등 고위공직자 대형부패사건이 부패인식지수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청렴도가 답보상태에 있고 국가순위가 하락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각적인 청렴도 개선 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다각적인 청렴도 개선 대책 추진

우선 고위공직자 부패고리 차단과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금지 및 청탁수수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역토착 비리에 대한 감시 강화와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다음으로 대기업 등 민간부문 청렴도 향

상을 위해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조기 정착, '분야별 민간 청렴도평가 시범실시, 공공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국가청렴지수' 개발 등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로 청렴문화를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 청주에 개원 예정인 '청렴교육연구원(가칭)'을 기반으로 공직자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청렴 교육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한다.

넷째로 반부패 국제협력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엔국제반부패협약' 및 'G20반부패행동계획'의 이행 점검에 나서는 등 국제공조 체제 및 국제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무튼 부패문제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더라도 실천주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백악이 무효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기업 등 실천주체들의 자성과 더불어 출신수범을 기대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 각 분야마다 높은 투명성과 공정한 사회, 건강한 민관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는 청렴선진국 사례들을 많이 도입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독자투고

이 광 성

거진읍 거진6리



설악권역 통합 왜 문제인가

게 특히 고하고 싶습니다. 이 분들이 현재 고성군 성장동력의 주체들이요, 고성군의 요소요소에 요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나 또한 이런 분들과 함께 가난을 헤쳐 나가며 오늘에 이른 고성군 신세대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렇지만, 이 분들도 자녀를 둘 셋 두었고 그 자녀들을 힘있게 대학까지 가르쳤습니다. 대학까지 가르쳤지만, 그 자녀를 고성군에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 애들에게 더 좋은 삶의 질을 찾아 떠나라고 가르쳤으니까요. 이것이 고성군의 인구 유출의 시발점이지요, 가장 큰 핵이며 앞으로 고성군이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고도성장을 해나가는데, 고성군은 고도성장이라는 향공모함에 탑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슬한 위정자들의 감언이설에 우리 군민들은 갈채와 호응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기억할 겁니다. 설악권역에서 출마 후 당선된 힘 있던 국회의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 한병기 전 국회의원, 정일권 전 국회의장, 정재철 전 장관 등 윗분들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정치계의 거물중 거물이었다.

이 분들이 우리 고성군에서 표를 얻고자

공약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도로를 건설해준다. 공장을 유치시켜준다. 그러나 공장은 고성군에 지금껏 없으며 도로는 지금도 간성에서 대진까지 편도 1차선 도로이며, 현재 공사중인 4차선도로는 10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악권역 고성, 속초, 양양, 인제에서 당선돼 국회에서 거물급으로 발돋움하신 분들도 내팽겨친 고성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성군 지역유지라고 할 수 있는 0.5% 몇몇 분들이 통합반대 운운하면서, 군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여론을 봉합하려는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고성군의회에서 통합에 반대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왜 군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통합반대를 선언합니까? 고성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에 해당되지요.

마지막으로 주둔하는 군인들에게 고성군에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지방자치 20년 동안만 보더라도 직업군인들 생활공간이 모자라 고성군에 협조를 부탁했지만, 모두가 나 몰라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전방 고성군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무기조작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장소 제공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서, 고

성군을 떠난 직업 군인들과 가족들을 속초에서 고성군으로 돌아오게 해야한다는 논리는 또 맵니까?

군청 공무원들 속초에서 출퇴근 한다고 여론화 된 것이 벌써 몇십년전 이야기입니까? 공무원들 고성군 들어와 살라고 억박 지르지 말고, 차라리 대학졸업후 고성을 떠난 우리 자녀들 고성군 살만하니까 돌아오나라 합시다. 더욱이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군수 업무용 차량이 행안부장관 차량보다 더 고급이며 7천만원짜리 고급세단이 무슨 말이며, 군청사가 지적한 의회에서 어느 군의원이 지적 한번 하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방자치 20여년 동안 고성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 판단해보시고, 이런 글을 올리는 본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면 던지십시오.

고성군 기득권자 0.5%의 여러분, 고성군이 왜 이토록 낙후했으며 고성군이 배출한 훌륭한 정치인들도 왜 고성군을 고도성장의 번영에 올리지 못하고 도태시켰는지 그것부터 파악하신 후 통합문제를 논하셔야 합니다.

속초시가 전국 밑빠진 독상을 몇 번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고성군 재정 또한 공무원 봉급도 자치능력으로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며 궁핍한 군 재정은 아랑곳없이 군의원 봉급 올려 달라는 신문지상의 엄살을 보면 가난한 고성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아픈 배신감을 느낍니다.

설악권역 통합에 따른 반대와 찬성의 합의는 온전히 군민의 몫입니다. 군의회에서 확실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 반대를 하지 마시고, 고성군민들이 더 좋은 삶의 질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면서 군민들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통합에 대한 결론은 군의회가 아닌 주민투표로 판가름이 나야 합니다.